

강기정 시장 “30조 대기업 투자펀드 조성”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9일 정부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지원할 재정 20조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혁신기업 유치와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3조원의 성장 마중물을 투입해 30조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지원금(20조) 활용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대기업 투자펀드는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세계적 기업 유치를 직접 투자하고, 스마트팜과 복합관광타운 등 고부가가치 농산어촌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에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기업과 지역산업 고도화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초대형 산업 성장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며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투자펀드는 특별법 제270조에 따라 설립될 ‘투자공사’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대만의 경우 정부 직접 투자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성장시켰고, 일본 역시 TSMC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역이 함께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한 창업·혁신 펀드 성과도 소개했다. 광주시는 5000억원 규모의 창업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추진해 현재 6986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의무 투자액은 930억원이며, 지역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69개 기업에 486억원이 실제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강 시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기업 투자 펀드를 통해 반도체, 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지원금(20조) 활용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지원금 20조원 중 3조 마중물 투입 투자공사 설립해 펀드 운영... 반도체 등 글로벌기업 유치 투자수익금 지역발전의무배당 통해 지역에 재투자 선순환 뿌리산업·위기산업에 4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조 지원

너지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 비용과 투자 보조금 지원이 핵심 특전(인센티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기업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과 투자 보조금”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과 투자 보조금 지원이 확보된다면 대기업 투자 유치가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투자 펀드는 투자 기업의 성과와 연동해 재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 의무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

이다. 강 시장은 “지역발전 의무배당은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부강한 광주전남의 선순환 일자리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7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7조원 가운데 4조원은 동부권 철강·화학 소재 산업, 서부권 조선·농수산물 가공 산업, 광주의 자동차·가전 뿌리산업 등 기존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 또 1조원은 지역화폐에 추가 투입,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해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평균 연봉 5000만원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수도권과 지역 기업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도 추진하겠다”며 “현재 3800만원 수준인 광주 평균 연봉을 ‘5000만원 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투자 펀드와 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최소 15만개에서 최대 5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20조원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기업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강한 광주·전남의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광양경자청, GFEZ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체험형 경관정책 마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1일 청사 회의실에서 GFEZ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 11조 및 시행령 5조에 따라 제3차(‘26~’35) GFEZ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다.

제3차 경관계획은 GFEZ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문화·자연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글로벌 경관 미래상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2035년까지의 단계별 실행 경관계획과 유형·요소별 경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경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경자청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 GFEZ 조화회의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공청회는 GFEZ 경관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주변 시군 경관행정과 어우러진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경자청 지역개발과(061-760-5323)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시,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실무... 현장점검 통해 실효성 높여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9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와 위·수탁 사업자 소속 중대재해 담당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 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비교 ▲중대산업재해 수사 및 처벌 사례 ▲질의응답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으로 구성했다. 강사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을 역임한 최은나 공인노무사가 맡았다.

교육 2부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인 성남시 분당정자교 붕괴사고 수사를 대응했던 송경중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 주요 판례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 대응 방안 등을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설명했다.

광주시는 교육 이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 및 종사자 모두가 365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심도시 광주가 되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인 기자

전남도, 중동사태 비상경제 대책 TF 가동한다

시군과 재난안전 등 대책회의, 상황 점검·분야별 대응 모색

황과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를 가동하고, 10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과 에너지 수급, 도내 수출기업 통상 대응 등 분

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물가 안정과 도내 수출기업 보호,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급 관리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 질병 확산 차단과 산불 재난 예방 등 봄철 재난 분야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지반 약화에 따른 시설물 붕괴, 주택 화재 안전관리, 사업장 위험시설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2개 시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